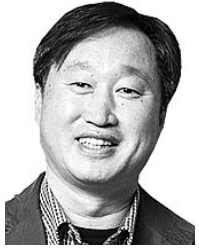


다산포럼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한국사)

다산(荊山) 정약용(丁若鏞)의 장인(丈人) 홍화보(洪和輔)는 무신(武臣)이었지만 마치 여인처럼 몸이 가냘팠다. 키도 작아서 어느 누가 보아도 무인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용맹은 남보다 뛰어났다. 타고난 성품도 호탕하여 병법과 영웅들의 이야기를 좋아하였다. 1761년(영조 37)에 장상(將相)과 대신들에게 문무(文武)를 겸비하여 장수가 될 만한 자를 천거하도록 한 적이 있었다. 이때 홍화보가 훈련원 초관(訓鍊院初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들 그를 추천하였기 때문이다.

홍화보의 인품과 명성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사도세자가 죽을 때였다. 1762년(영조 38)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당시 집권 세력들은 사도세자가 향후 조선의 국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영조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세자가 국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세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사도세자가 평양에 있는 군대

다산의 장인 홍화보의 용기

를 동원하여 아버지 영조를 죽이고 왕이 되고자 역모를 준비하고 있다는 모함이었다. 평소 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영조는 이러한 거짓 내용을 듣고 나서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장경궁 휘령전으로 아들을 불러오게 하여 칼을 주고 자살하라고 지시하였다.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하였다. 앞으로는 공부 열심히 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되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빌고 또 빌었다. 그러나 영조는 매정하였다. 아들인 사도세자에게 칼을 주고 자결하라고 거듭 지시하였다. 사도세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칼을 잡고 자결하려 했다.

이때 사관들이 달려서 자결에 실패한 뒤 바닷과 벽면에 있는 돌에 머리를 찧었다. 머리에 피가 줄줄 흐르자 사관들은 어의를 불렀다. 그때 어의 중 최고의 지위에 있는 태의(太醫)인 방태어(方泰鰲)가 사도세자를 치료해 주었다. 그리고 우황청심환을 올려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였다. 방태어는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영조는 엄청나게 진노하였다. 자신은 아들에게 죽으라고 명령을 하였는데, 의관이 세자를 치료해 주었으니 임금인 자신을 능멸하였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영조는 선전관으로 있는 홍화보에게 방태어의 머리를 베어 오라고 명령을 하였다. 홍화보는 영조의 명을 듣고 방태어의 집으로 갔다. 국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홍화보는 떨고 있는 방태어의 머리카락 한 올을 베어서 영조에게 갖다 바쳤다. 방태어의 머리를 베어 오라

고 명령을 하였는데 선전관인 홍화보가 머리카락 한 올을 베어서 바쳤으니 영조는 너무도 화가 났다. 그래서 홍화보 역시 유배를 보내고 방태어의 머리를 다시 베어 오라고 명령하였다.

이때 홍화보는 자신이 왜 머리카락을 베어왔는지를 이야기하였다. “전하! 우리 조선에서는 상투를 머리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투가 잘리는 것은 곧 머리가 잘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투를 자르는 것은 머리를 자르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투 전체를 자르나 상투의 머리카락 한 올을 자르나 모두 같습니다. 상투의 머리카락 한 올을 잘라도 조선의 선비들은 치욕을 느낍니다. 그러니 상투의 머리카락 한 올을 자르는 것은 머리를 베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 대신 상투 한 올을 자른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 홍화보를 유배 보냈던 영조는 이 말을 들은 뒤 다음 날 유배에서 풀어주었다. 만약 왕이 화가 난 기분대로 하였으면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의관을 죽이는 일이 생길 수 있었을 것이다. 홍화보의 지혜와 용기 있는 행동으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 홍화보는 위급한 순간에도 자신의 안위를 뒤로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선택했다.

이러한 품성과 용기가 훗날 사위인 다산에게로 전해진 것이다. 다산이 매사에 신중하고 깊이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장인으로 부터의 가르침 때문이었을 것이다. 늘 높은 것을 배우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산의 정신이다.

NGO칼럼



신광식
고려인마을 법률자문단 변호사

지난 2015년 메르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건만 안타깝게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장 임원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는지 생각해 되었고 또다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소위 강대국이라는 미국은 물론이고 사회복지가 잘 되었다는 유럽에서조차 수많은 사람의 사망에 대해 속수무책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K방역의 우수성으로 인해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 비해서 초기 대응을 잘하여 코로나로 인한 사망을 줄였다. 마스크 쓰기, 철저한 방역, 폭넓은 진단,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한 중증 환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 덕분이다. 이제 는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학수고대해 본다.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비율이 5.7%에 불과하다. K방역의 성공은 전국 35개 지방의

포스트 코로나 대비 공공의료기관 확충해야

료원을 주축으로 ‘코로나19 전담 병원’을 맡은 41개 공공병원의 수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공공병원은 1차 대유행에서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던 의료편중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응급 상황에 더 잘 대비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에 거주하던 의료 이용 형평성을 누릴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의료안전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서울에서 대진 거리인 200km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약 7조 3000억 원이 든다는 데 이 돈이면 30개에 달하는 현대식 공공병원을 세울 수 있다고 한다. 지금은 편익적인 인프라 확충보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예산을 적극 투입해야 할 때다.

공공의료 인프라는 지역적으로나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하고 질적으로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들이 지역 주민에게 포괄적이고 양질의 의료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로 확충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료기관이란 단순히 소외된 계층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역 내 응급 의료, 중증 질환 등 중요한 질병에 대해 치료 가능한 병원이다.

공공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과잉 진료나 과소 진료가 아닌, 질병에 따라 환자에게 적합한 진료를 실시하는 ‘표준 진료 및 모델 병원’이다. 둘째, 수평적·수직적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역할이다. 셋째,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병원’으로서 민간 의료기관

에 대한 공익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국가적 재난·재해·응급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염병 및 재난 대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건강보험 정책 도입을 위한 국내 의료산업의 테스트 베드(Test-bed)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수적인 지역 사회 의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이 통상적인 진료뿐만 아니라 중증·응급·재활 치료 및 감염병 대응이 가능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규모로 확충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전국 70개 중진료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병원의 확충은 기존 소규모 의료원이 있는 곳은 적정 규모로 증설하고 의료원 자체가 없는 곳은 신설하거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적정 규모의 민간 병원을 인수해 재개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설이 필요한 곳에는 경제성 분석 항목인 ‘에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양질의 공공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우수한 의료 인력 등 각종 자원의 확보뿐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바 전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의료 자원을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익적 별도 기관(법인) 설립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또다시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논의에만 그쳐선 안 된다. 고속도로 하나 없으면 불편하기는 하지만 당장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없다면 나의 가까운 가족, 이웃의 생명이 위협하다.

코로나19와 사투, 공무원의 눈물 닦아 주려면

에게도 크나큰 충격이기도 했다.

현재 우리 남구정을 비롯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17개월 가량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확진자 역학조사 및 동선 파악에도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면서 예방 접종 관련 업무도 늘어나고 있다. 보건소 직원들뿐만 아니라 구정의 모든 직원들은 현재 본연의 업무 외에도 자가 격리자 물품 전달을 비롯해 예방접종 콜센터 근무, 재난지원금 접수·처리, 고위험 시설 사전 점검, 코로나19 백신 접종 동시서 수집과 접종 안내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파견 업무가 잦다 보니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코로나19 업무가 한시적인 게 아닌 일상 업무가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광주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하반기 정기 인사를 앞두고 한시 기구 신설·폐지와 함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한시적 업무와 일상적 업무를 따져서 조직을 개편하자는 것인데, 지금과 같이 버거운 상황에서 조직마저 축소해 버린다면 공직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자치 분권 시대를 맞아 각 기초자치단체가 행정 변화에 맞춘 조직을 구축하여 행정 조직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인 광주시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광주 남구청 1100여 명의 공직자들은 전국의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민 안전’과 ‘집단 면역 체계 완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코로나19에 맞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있다. 총알 배속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자가 격리 키트를 제공하고, 각종 민원에 응대하는 과정에서 험한 욕설을 듣더라도 끝까지 정중동 자세를 유지해 나가는 이유는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다.

코로나19는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자녀 양육 및 가정생활에 큰 고충을 호소한다.

곤히 자고 있는 아이들을 낚든 채 이른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은 시간 녹조가 되어 퇴근하기를 반복하다 보니,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어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직원들도 있다. 최근 한 직원은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일마였는데, 지금은 가족에게 부담만 안겨 주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며 흐느꼈다. 구정의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역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국민과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랄 뿐이다.

공무원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이다. 오늘도 현장에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시민들이 건네는 “수고한다” “고생 많다”는 한마디는 그동안 쌓인 피로도 잊게 한다. 공직자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지 않는 날이 하루 빨리 찾아오길 기대해 본다.

社說

5·18 정신적 피해 일괄 배상 방안 모색을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국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오면서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700여 명이 이르는 대상자들이 실제 배상을 받기까지는 지루한 소송전을 감당해야 하는 실정여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현재는 잇그제 광주지법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 제16조 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 심판제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부당한 국가 폭력으로 입은 피해 회복 책임의 범위에 단순한 노동력 손실뿐만 아니라 고문 후유증이나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시켜 국가 배상의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18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피해자들은 5·18

당시 사망 161명, 부상 후 사망 113명, 행방불명 78명, 부상 2504명, 연행·구금 과정 등에서 부상 1217명, 연행·구금 1610명 등 모두 5708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5·18 당시 구속당해 부상을 입은 다섯 명은 지난 2018년 12월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법의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이들의 신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또한 80여 명의 피해자들이 추가 소송 준비에 나서는 등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문제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에 나설 경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제로 배상을 받기까지 또다시 수년간 소송전을 벌여야 한다는 점이다.

5·18 유가족들은 그동안 보상금마저 충분히 받지 못한 데다 대다수가 고령이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국회는 5·18 당시 정신적 피해를 일괄 배상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1년 앞둔 지방선거 벌써부터 과열인가

내년 6월 1일로 예정된 제8회 지방선거가 1년 앞둔 다가오면서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입지자들의 경우 무엇보다도 당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당내 경선 승리가 곧 당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경선 판도를 좌우할 권리당원 모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8회 지방선거 후보 선출 권리당원 권리행사 시행일을 2022년 3월 1일로 확정했다. 권리당원의 경우 입당 후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만 경선 투표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권리 행사를 위한 입당 기준일은 올해 8월 31일까지이며, 당비 납부 기간(6회 이상)은 지난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이 된다.

이처럼 경선 투표를 위한 입당 기한이 당초 올 6월로 예상됐으나 8월 말로 결정되면서 입지자들이 당원을 확보할 시간은 2개월 정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 내년 지

방선거에 출마할 민주당 소속 입지자들은 현재 권리당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규를 통해 단체장 경선의 경우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조사 결과 50%를 반영하고, 기초·광역 지방의원은 권리당원 조사 결과를 100% 반영하고 있다. 사실상 권리당원 표심이 경선을 좌우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입지자들이 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받기 위한 구애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벌써부터 과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민주당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이 지역의 특수한 구도 속에서 국회의원들의 ‘줄 세우기’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따라서 입지자들은 이러한 구태에서 벗어나 선의의 경쟁으로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랐을 뿐 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죄는 바로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한 것입니다.” 공수부대장교 출신 ‘오채근’ (안성기 분)은 정신과의사와 상담하며 이렇게 말한다. 그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자행한 일을 잊지 못한 채 40여 년 동안 괴로워한다. 그의 고백은 당시에 발표 명령을 내렸던 책임자들에게 대한 분노로 이어진다. “그들에게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런 짓을 하고도 맘 편히 살 수 있는지...”

‘이들의 이름으로’

최근 개봉한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감독 이장원)의 한 장면이다. 이 영화와는 달리 가해자인 공수부대원을 주인공으로 한 이번 영화는 ‘진정한 반성’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이 영화는 70% 가량을 광주에서 촬영했는데, 광주 시민들은 식당 등 촬영 장소를 제공하거나 ‘재능기부’로 단역과 엑스트라를 맡기도 했다.

한데 이번 영화 개봉을 전후로 실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7공수여단 부사관 출신의 70대가 광주를 찾아 자신이 사살한 민간인(당시 25살)의 유족에게 사죄한 것이

3공수여단의 한 예비비 소령 또한 41년 만에 5·18 민주묘지를 찾아 희생자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했다.

5·18을 소재로 한 최초의 35mm 영화 ‘부활의 노래’에 이어 30년 만에 5·18 영화를 또다시 만든 이장원 감독은 기자와 인터뷰에서 “그 사람이 사죄하는 것을 보고 우리 영화와 너무 비슷해 소름이 돋았다”면서 “5·18로 상처받은 피해자들의 응어리를 영화로나마 풀어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당시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됐던 군인들이 70대로 변할

만큼의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발표 책임자 규명과 암매장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당시 계엄군으로 광주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고백이 절실하다.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채근’ 캐릭터 같은 영화 개봉을 전후로 실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7공수여단 부사관 출신의 70대가 광주를 찾아 자신이 사살한 민간인(당시 25살)의 유족에게 사죄한 것이

/송기호 문화2부장 song@

기 고



이현
광주시 남구청 자치행정국장

신중 플루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행정 수요는 폭증한다.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공무원의 업무량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피로감도 누적된다.

지난해 1월에 발생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만 보더라도 그렇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500여 일째 비상근무에 나가고 있는 공무원들의 상황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 휴일도 없이 장기간 근무가 이어지면서 요일에 대한 감각도 둔해졌고, 근무 시간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체력도 방전된 상태다.

최근 이 같은 상황을 보여 주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경북 안동시 보건소 소속 50대 팀장의 경우 자택에서 쓰러진 후 사경을 헤매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격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산시 간호직 공무원의 죽음은 공직사회를 비롯해 우리 국민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